

2022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해설

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일제의 탄압적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 ②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경찰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 ③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되었고, 1969년 「경찰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경정 및 경장 계급이 신설되었다.
- ④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정답】 ④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 ① (×)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의 직무·권한은 변화되지 않았다. 즉, 종래 헌병이 행하던 것을 경찰관에게 이양한 것일 뿐,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한 경찰 본래의 업무 외에도 각종 조장행정원조, 검사사무, 민사소송조정사무, 집달관 사무 등도 그대로 수행되었다. 또한 1919년 4월 제정된 악법인 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에 의하여, 또한 1925년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는 등 오히려 탄압체제가 강화되었다.
- ② (×) 미군정시대에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시키고, 고등경찰을 폐지하였다. 또한 경제경찰업무를 경찰업무로부터 제외하고, 각종 치안입법(「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보안법」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를 하였다. 1947년 3월 국민의 지원이나 이해가 없는 경찰활동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각 관구경찰청에 『경찰공보실』을 설치하였다. 또한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 ③ (×) 1953년 12월 경찰관의 권한행사의 한계를 규정한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공포되었다. 1969년 1월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정한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여, 경찰관의 계급구조를 8개에서 10개로 확대하였다(경정·경장 2계급 신설).

2.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국회법」상 경위(警衛)나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 ②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 ③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④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의 영역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경찰의 『사물관할』이란 경찰행정관청이 광의의 경찰권(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찰의 사물관할 범위를 넘는 영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행정관청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보기의 내용은 『지역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요한 슈테판 뤼터(Johann Stephan Pütter)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공법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무는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복리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의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은 승전기념비의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명령은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 ③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하여 신민(臣民)의 거의 모든 생활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 ④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14조 제1항은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을 성문화시켰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①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Kreuzberg) 판결에 의하여 경찰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법해석상 최초로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베를린의 크로이츠베르크언덕에 있는 승전기념비의 조망 및 그곳으로부터 시가지 전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조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의 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건축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경찰청장이 발한 법규명령에 대하여, 그러한 명령은 심미적 이유로 내려진 것으로 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함으로써 경찰의 임무는 위험방지에 한정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하는 계기를 만든 판결이다.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적 수권조항과는 무관하다.

4.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협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구체적 위협은 개별사례에서 실제로 또는 최소한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 ② 오상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협방지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이 묻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외관적 위협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상황판단을 하였음에도 위협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 ④ 위협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협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협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상황판단을 할 때, 위협의 발생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위협의 실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경찰기관이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가지고 있으나,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찰기관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직접적인 경찰권의 발동은 불가하며, 위협의 존재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위험조사 차원의 예비적 조치만이 가능하다(예 : 항공기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제보).

5. 경찰의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Dirty Harry 문제'는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관련된 딜레마적 상황이다.
- ②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 ③ 셔먼(1985)의 미끄러운 경사(slippery slope)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에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④ 전체사회가설은 신입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윌슨(O. W. Wilson)이 시카고 경찰의 부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에 의하면, 사회 전체의 풍조와 정서가 경찰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회 전체가 경찰관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된다. 부패는 비교적 해악이 없고 좋은 의도를 가진 관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백한 부패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는 전체사회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결과인 것이다. 보기의 내용은 『구조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Dirty Harry 문제' = 'Dirty Hand'(더러운 손)와 동일한 의미

올바른 정치적 행동은 도덕적 규범과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은 도덕과 정치가 맺고 있는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어떤 사회에 더 나은 결과를 불러오기 위해서라면 정치 지도자는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을 저질러도 되는가?" '더러운 손'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도덕적 규범이나 근거가 법, 정치, 문화, 사회적인 다른 모든 이유들에 앞선다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정치 지도자들이 때로 도덕적 원리 원칙을 어기며 그들의 손을 더럽혀야 할 때도 있다고 주장한다.

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참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 ①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③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④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⑤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⑥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단체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단체
- ⑦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⑧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⑨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⑩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2022년 1차 순경】

- ①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X)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중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8. 경찰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통해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명령권은 내부적 통제의 일환이다.
- ④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도는 사법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X) 우리나라는 경찰조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통제로서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은 경찰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다만,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9.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서 각각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경찰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③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 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 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3조).

【참고】 인권위원회의 구성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2항).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3항).

10. 「경찰청 감사 규칙」상 감사결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022년 1차 순경】

- ㉠ 변상명령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 ㉡ 경고·주의 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 시정 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개선 요구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해설】 ㉡은 옳은 설명이며, ㉠, ㉢, ㉣은 틀린 설명이다.

【참고】 감사결과에의 처리 기준(「경찰청 감사 규칙」 제10조)

구 분	내 용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검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시정 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주의 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기관대상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개선 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 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 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고 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

11. 다음은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비교설명이다(Sparrow, 1988). 질문과 답변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경찰은 누구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법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기관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 ②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현장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 ③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시간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라고 답변할 것이다.
- ④ 가장 중요한 정보란 무엇인가?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 사항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범죄사건 정보(특정 범죄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사건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전통적 경찰활동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범죄사건 정보가 되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범죄자 정보가 될 것이다. 즉, 전자는 사후통제에 중점을 두며, 후자는 사전통제에 중점을 두게 된다.

【참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분

구 분	전통적인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주 체	경찰이 법집행의 책임을 지는 유일한 정부기관임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음
경찰의 역할	범죄해결(법집행자, 범죄해결자)	문제해결(서비스제공, 문제해결자)
업무평가 방식	범인 검거율(사후통제)	범죄 및 무질서의 감소율(사전통제)
업무의 우선순위	범죄와 폭력의 퇴치	범죄와 폭력의 퇴치 + 주민 문제해결
효율성의 측정	범죄 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의 정도
조직구조	집권화	분권화
타 기관과의 관계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협동·상생구조
강조사항	① 법과 규범에 의한 규제 ② 법의 엄격한 준수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 강조

12. 다음 경찰활동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A경찰서는 관내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학교전담경찰관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① 낙인이론
- ② 일반긴장이론
- ③ 깨진 유리창 이론
- ④ 일상활동이론

【정답】 ①
【해설】 보기의 설명은 형사입건 대신 선도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양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낙인이론』에 의하면 어떤 행위가 일탈이라고 낙인찍히면 그러한 행위를 한 자는 일탈자가 되는데, 이러한 낙인을 찍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다. 한번 일탈자라고 낙인찍힌 자들이 스스로 일탈자라고 인식하여 자기관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것이 완전한 범죄인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② (×) 『긴장이론』(머튼)은 병리적 사회구조가 특정한 사회부분에 긴장을 유발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비행으로 나아가는지를 설명한다.
③ (×) 『깨진 유리창 이론』(일슨, 켈링)에 의하면, 무질서한 행위와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면 주민들은 공공장소를 회피하게 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며, 증가된 무질서와 약화된 사회통제는 범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소한 무질서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대응을 강조한다(무관용의 원칙).
④ (×) 『일상활동이론』(코헨, 펠슨)에 의하면,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아, 모든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한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VIVA 모델)로 대상의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을 제시하였다.

13. 뉴먼(1972)은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를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보기 1>의 설명과 <보기 2>의 구성요소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2022년 1차 순경】

<보기 1>

(가)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주민의 적극적 행동의지를 보여줌

(나)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함

(다)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임

<보기 2>

㉠ 영역성	㉡ 자연적 감시
㉢ 이미지	㉣ 환경

- | | (가) | (나) | (다)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정답】 ②

【해설】 뉴먼의 『방어공간이론』의 출발은 먼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주거지역이 안전하고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판단한다. 다음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하여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적 감시를 강조한다. 최종적인 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주거에 대한 영역성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장소를 자신들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이든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본다(예 : CCTV의 설치 등).

14.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통솔의 범위’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 ②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 함으로써 상·하계층 간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명령통일의 원리’는 조직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고도 그 상관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④ ‘할거주의’는 타기관 및 타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정·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할거주의』란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부정적인 의미이다. ‘할거주의’는 타기관 및 타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1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심사승진임용·시험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으로 구분한다.
- ②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심사승진임용될 수 없다.
-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나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X)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 제2항).

【참고】 승진임용의 제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강등·정직 : 18개월

㉡ 감봉 : 12개월

㉢ 견책 : 6개월

16.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2022년 1차 순경】

- ㉠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 ㉢은 직권면직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 ㉣은 직권면직 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참고】 직권면직의 사유

직권면직의 사유	징계위원회 동의 여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계위원회 동의 불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징계위원회 동의 불요
직위해제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2호) ①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1호) ②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3호) ①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2항 제1호) ②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2항 제2호)	징계위원회 동의 필요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경찰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징계위원회 동의 불요

17. 「경찰장비관리규칙」상 무기고 및 탄약고 설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무기 탄약고 비상벨은 상황실과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 장소와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와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 ③ 무기고와 탄약고의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쇠창살시설을 하고,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탄약고 내에는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명은 건전지 등으로 하고 방화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단, 방폭설비를 갖춘 경우 전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 115조 제7항).

18.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1조 제1항).

【참고】 경찰예산의 편성 절차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1/31) → 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3/31) → 예산요구서의 제출(5/31)
→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120일 전) → 국회의 심의·의결(30일 전)

【참고】 경찰예산의 집행 절차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 예산배정계획서 작성 → 예산배정 → 예산배정의 통지 → 예산재배정

【참고】 경찰예산의 결산 절차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2월말까지) →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4월 10일까지) →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송부(5월 20일까지) → 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5월 31일까지) → 국회의 예산결산심의

19.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Ⅱ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 ②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비밀의 구분

구 분	내 용
Ⅰ급 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Ⅱ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Ⅲ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참고】 비밀분류의 3대 원칙(「보안업무규정」 제12조)

구 분	내 용
과도·과소 분류 금지의 원칙	①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암호자재는 Ⅱ급 이상, 음어자재는 Ⅲ급 비밀,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한다.
독립분류의 원칙	①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②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하였을 경우 독립분류의 원칙에 반한다. ③ 상급부서의 지시문서가 Ⅱ급이라고 해서 하급부서의 보고문서까지 Ⅱ급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0.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2022년 1차 순경】

- ㉠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여건, 각종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 ㉡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 ㉢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휴무일 포함)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 ㉤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 ① 5개 ② 4개 ③ 3개 ④ 2개

【정답】 ②

【해설】 ㉠, ㉡, ㉣, ㉤은 옳은 설명이며, ㉢은 틀린 설명이다.

㉢ (X)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은 제외한다.

【참고】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및 제19조

구 분	내 용
의 의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는 출장소형 치안센터 중 근무자가 치안센터 내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형태의 치안센터를 말한다.
운 영	①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우자는 근무자 부재시 방문 민원접수·처리 등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경찰대원을 상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은 제외한다.
특 례	①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조력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기준 및 금액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자의 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임기를 마친 경찰관은 희망부서로 배치하고, 차기 경비부서의 차출순서에서 1회 면제한다.

21.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호송경비업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③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변보호업무에는 재산의 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 경비업무의 유형(「경비업법」 제2조 제1호)

구 분	내 용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특수경비업무	①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

2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제외한다.
-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2항).

2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의 제지,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의 내용에는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 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법원의 잠정조치에 해당한다.

24.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②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 시설 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 ③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④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3호). 보기의 내용은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설명이다.

25.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2022년 1차 순경】

- ① 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②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다.
- ④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26. 「범죄인 인도법」 제7조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③

【해설】 「범죄인 인도법」상 ①, ②, ④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며, ③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참고】 범죄인 인도의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 ①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②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③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범죄인 인도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그 판단은 전적으로 피청구국의 판단에 의존한다.

-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 ③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 ④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 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명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②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항).

28.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지시문서'란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② '공고문서'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 ③ '일반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 ④ '법규문서'란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일반문서』란 법규문서, 공고문서, 지시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보기의 내용은 『민원문서』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공문서의 종류(「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구 분	내 용
법규문서	① 「헌법」·법률·명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에 관한 문서이다. ②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보게재 후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문서	① 고시 및 공고 등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 모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이다. ②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고시·공고 후 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시문서	①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이다. ②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비치문서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이다.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허가·인가·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이다.
일반문서	위의 문서들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이다.

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부담한다.

【정답】 ③

【해설】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④는 틀린 설명이다.

- ① (×)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 등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②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④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30.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50조).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은 면제한다.
-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참고】 질서위반행위의 인적 적용범위

- 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 ②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제1항).
- ④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제2항).
- ⑤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면제 및 감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 제3항).

32.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2022년 1차 순경】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제지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 ㉢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
-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 ㉡은 행정상(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 ㉣은 행정상(경찰상) 강제집행에 해당한다.

【참고】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종류

구 분	종 류	내 용
전통적 수단	경찰강제 (직접적 수단)	①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② 경찰상 즉시강제(대인적 · 대물적 · 대가택적) ③ 경찰상 조사(현재는 독립적 영역으로 구분 인정)
	경찰벌 (간접적 수단)	경찰형벌(형벌 부과), 경찰질서벌(과태료 부과)
새로운 수단	금전적 제재	과징금(부가금), 가산세, 가산금(증가산금)
	비금전적 제재	공급거부, 명단공개(경찰상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취업제한, 해외여행제한

33.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가스발사총은 무기에 해당한다.
- ②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신부에 대하여 전자총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경찰관은 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총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권총·소총·기관총·함포·크레모아·수류탄은 『무기』에 해당하나, 가스발사총은 『분사기 및 최루탄 등』에 해당한다.
【참고】 경찰장비의 종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구 분	내 용
경찰장구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총격기, 방패, 전자방패
무 기	권총, 소총, 기관총(기관단총 포함),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폭약류, 도검
분사기, 최루탄 등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경용 포함), 최루탄(그 발사장치 포함)
기타 장비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발사기, 도주차량 차단장비

34.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③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손실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3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에 따른 대상자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각 단계와 내용의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소극적 저항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
- ② 적극적 저항 -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
- ③ 폭력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
- ④ 치명적 공격 -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그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

【정답】 ④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X) 『치명적 공격』이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총기류, 흉기, 둔기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3자의 목을 세계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기의 내용은 『폭력적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참고】 대상자의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구 분	내 용
순 응	『순응』이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소극적 저항	『소극적 저항』이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적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이란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연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위해 수준이 낮은 행위만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폭력적 공격	『폭력적 공격』이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상태를 말한다.
치명적 공격	『치명적 공격』이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36.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공통된 행정의 법 원칙은 무엇인가? □□□□ 【2022년 1차 순경】

<보 기>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4조 제2항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비례의 원칙 ② 평등의 원칙
 ③ 신뢰보호의 원칙 ④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정답】 ③

【해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행위의 정당성·존속성에 대한 사인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원칙』과 대체로 유사한 개념이다.

【참고】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판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7.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 ④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 ②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

38. 다음 행정행위 중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2022년 1차 순경】

- ① 자동차운전면허
- ②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 ③ 한의사 면허
- ④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

【정답】 ④

【해설】 『특허』란 직접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기타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행정행위인 특허는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언제나 신청이 필요하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하여 하는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①, ③의 경우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며, ②의 경우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39.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 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④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취소소송

【정답】 ①

【해설】 민중소송은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해당하나, 항고소송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항고소송의 종류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참고】 행정소송의 종류(「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

구 분	내 용	
항고소송 (주관적 소송)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무효등확인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당사자소송 (주관적 소송)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민중소송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기관소송 (객관적 소송)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40. 오늘날 우리나라 경찰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2022년 1차 순경】

- ① 수사절차 전반에 걸쳐 주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및 파출소에 ‘영장심사관’,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 ② 집회·시위에 대한 관점을 관리·통제에서 인권존중·소통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스웨덴 집회·시위 관리 정책을 벤치마킹한 ‘대화경찰관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③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치안시스템 전수,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인프라구축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④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업무가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답】 ①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오늘날 경찰의 정책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제적으로 그때 그때의 정책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나, 문제 보기의 내용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수사절차 전반은 기본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전제로 한다. 수사절차 전반에 있어 주관성이 개입되면,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 저해되며, 특히 국민의 인권보호 관련 심각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